

데스크 시각

장미 대선을 호남 미래 전인차로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이다. 광주의 광산업은 내리막길에 들어선 지 오래며 금호타이어는 매각의 칼바람 앞에 있다. 전남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벨리를 구축하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남 제조업 생산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조선·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 빠져 있다. 쌀값 폭락 등으로 농어민의 등골은 휘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전남 인구는 지난 3월말 기준 189만944명으로 190만 명 선이 붕괴됐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2040년 광주의 전체 95개 동 가운데 34개 동(35.8%)이, 전남의 전체 297개 읍면동 지역 중 98개 읍면동(33.0%)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지역 경제 생태계 복원 시급

이러한 경제 생태계 붕괴로 청년들은 떠나고 실물경제·골목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 전반에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약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 전반이 침체하면서 남도 특유의 품 넓은 인심도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호남 경제

생태계 복원'이 중심 화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적·시대적 명분도 좋지만 경제적 실리를 쟁겨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호남 공약은 기존의 현안 사업을 재탕하는 포괄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은 앞으로 보다 꼼꼼하게 후보들의 공약을 따지고 호남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지의 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대선 주자들이 미동도 하지 않거나 대총 넘어가려 할 공산이 크다.

고질적인 호남 인사 차별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는 호남의 미래를 견인할 기반이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 호남 인재들은 푸대접을 넘어 노골적인 차별을 받아 왔다. 바른정당 정은천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출신자를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은 각각 36.6% 34.9%로 집계된 반면 호남 출신은 15.5%, 10.9%에 불과했다. 사실상 호남 소외가 고착화된 것이다.

실제로 영남 지역 광역 시·도 공직자가 정부 부처로 발령이 나면 대부분 직급 강등 없이 본부로 가는 반면 광주·전남의 경우 직급 강등은 물론 외청이나 사업소

로 배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핵심 보직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 채 사업소를 떠돌다가 다시 낙향하는 눈물겨운 사례도 많았다. 검찰·국세청·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의 경우 호남 소외는 더욱 심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공직자 눈물 누가 닦아 주나

10년 보수 정부를 거치는 동안 호남의 인적 기반도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였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호남 공직자들의 경력 미비 및 단절 등으로 핵심 보직 발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인사부터 구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호남 총리론'까지 시사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호남 차별을 없애고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호남 경제 생태계 복원과 인사차별 철폐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호남 민심이 대권의 향배를 결정한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관측이다. 장미 대선 이 호남의 미래를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도 결국 호남 민심의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선택만이 호남의 미래를 밝게 열 수 있는 길이다.

社說

지자체 공무원 미리 확 뿌리 뽑을 수 없나

촛불·탄핵 정국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결국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공복(公僕) 의식 확립과 검찰 기관의 기강 점검 요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 검찰'을 실시해 총 81건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27건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10건은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나랏돈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갑질을 일삼으며 이득을 챙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적발됐다. 관용자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출근시간을 조작하거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아파트를 싼값에 넘겨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한 국토연

구위원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니 참으로 여처구니없는 일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소방령 승진자 5명이 500만 원을 모아 당시 본부장에게 300만 원, 본부 과장 등 4명에게 각각 50만 원씩을 제공했다. 또 하반기에도 소방령 승진자 5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 이 같은 인사 폐단이 관행처럼 돼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지난 몇 개월간 국가 리더십 부처 속에서 저질러진 이 같은 비리가 대선이라는 혼란한 틈을 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마침 감사원은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에 대한 집중 검찰에 들어간다고 한다. 공무원은 국가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공직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리와 책임을 되돌아보고 검찰 기관 역시 눈을 더욱 크게 뜨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주권 찾기... 오늘 보선에도 관심을

전남 지역 3개 선거구에서 오늘 치러지는 지방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현저히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일 진행된 해남 제2선거구(도의원)와 순천 나 선거구·여수 나 선거구(시의원) 등 보궐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평균 11.09%에 그쳤다. 해남 제2선거구에서는 총 유권자 2만 5048명 중 3008명이 투표해 12.01%를 기록했다. 여수 나 선거구는 8.45%(2만2746명 중 1923명), 순천 나 선거구는 14.38%(1만1212명 중 1612명)를 각각 기록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저조가 유권자의 상대적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치는 전남 지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18.85%에 크게 못 미친다. 선관위는 선거 무관심이 실제 투표율에도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뽑았

던 4·29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율이 6.74%에 그쳤고 실제 투표율도 36.0%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가 각종 정당 후보들이 출마하는 등 '대선 전초전' 성격이 띠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대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오는 5월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묻혀 지방선거가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데다 투표일이 휴일이 아닌 평일이라는 점은 큰 부담이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유권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자치 단체를 감시·감독할 지방의원을 뽑는 일의 중요성은 대통령 선거에 못지않다. 유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한마당 축제에 모두들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고

윈도심에 생기 불어넣는 도시재생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당이 들어서며 도시재생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애초 기대했던 파급 효과만큼은 달하지만 물리적 도시재생을 뛰어넘는 사회문화적 재생의 단초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4월 재선거를 통해 동구청장에 취임하고 1년 남짓 동구의 도시재생을 이끌면서 세 가지 큰 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첫째는 재건축·재개발 등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역사 등 소프트웨어적인 특색이 살아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도에서 보자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광주읍성과 4대 성문, 충장로 광주우체국 인근에 있었다는 회경루(喜慶樓), 1960년 대 말 태봉산을 열어 내었다는 계림동 경양방죽 등 도시를 대표하는 자연·문화유산의 부재는 두고두고 아깝다.

하지만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윈도심인 동구는 그만의 색깔을 지닌 관광자원이 여전히 풍부하게 남아있는 편이다. 광주를 대표하는 총장축제를 비롯해 야간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대인예술아시장·남광주밖기차야시장, 무등산국립공원과 불교문화유적, 허백련과 오지호로 대표

되는 예술의 거리 등이 그렇다. 여기에 더해 여산유원지 문화채색사업, 박물관·미술관 투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등 동구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관광활성화 콘텐츠가 동구만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부여해줄 것이다.

둘째는 관(官) 위주의 도시재생을 넘어 기업과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다. 도시재생에서 행정의 중요한 역할은 지역의 출연진 역할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있다. 노후한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의 역량 역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최근 동구 도심에는 15~34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주상복합건축물이 속속 들어서며 등 대규모 투자 유치기 활기를 띠고 있다. 동구의 도시개발과 주택재개발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에서

도 순차적인 착공이 이어지며 도시의 긴장을 깨우는 중이다.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동구의 발전가능성과 투자 가치에 기업들이 주목한 결과다. 동구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

고 있다. 마을마다 공동체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서 보듯 도시재생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도 반길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시재생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여서 공리하고 실행의 중심이 되는 거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단기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동구는 200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장미디어산업센터, 공동동례예술마당,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등 작가와 예술가, 마을활동가와 주민이 모이는 3곳의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거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다른 분야의 생산문화와 버무려져 융합되고 재창조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동구라는 도시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거친 풍상을 겪어 굵고 주름진 고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봄의 기운처럼 도시재생이라는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어느 나무보다 넓고 깊은 꽃그늘을 만들어 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은편칼럼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를 보며



한국환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우리 국민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배고픔도 참고 정부를 따랐으며, 자신보다도 나라를 더 걱정하며 사랑했다. 그런 데 박근혜 전 정부는 정치적 무능과 일개 한 아주머니(손순실)의 농간으로 국정 전반이 흔들렸고, 국민은 정경유착 등으로 망가진 경제를 되살리려는데 정부와 재벌이 배신함에 따라 분노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국정운영·경제체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안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취임시 때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자업자득으로 '탄핵 파면'을 당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때 화자됐던 말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하며 역사 앞에 바르게 설 것이라는 희망을 나눴지만, 참사의 실제적 주범 유병언은 많은 의구심 속에 앙상한 뼈로 사라지고 사건진상 또한 확실한 규명 없이 흐지부지 되더니, 그 결과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의 비정상적인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

그러하여 국가 통치자의 리더십 부재, 헌법과 법을 준수하지 못한 국정농단으로 '광장의 촛불집회'를 몰고 왔으며, 마

침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현재의 판결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시작돼 결국 법정에서 '법치 민주주의'로 탄핵을 이끌어냈다.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다.

탄핵판결까지 20회 걸쳐 연 1600여만 명 국민은 자발적 촛불집회를 통해 탄핵을 요구했고, 현재에서 합법적 절차를 걸쳐 심판한 것이니 정부수립 이후 우리 민주주의 성숙함을 엄숙히 선포한 것이다.

하지만 '촛불집회의 정신'은 대통령 탄핵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쌓여온 비정상적인 적폐 청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념·지역·계층·세대 갈등과 대결을 포용과 화합으로 이끌어 안정적 변화를 주도할 리더가 필요하다.

5월은 대선이다. 이번 대선은 '광장집회'에 나타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대결로 갈라진 국면을 통합하며 경제 위기극복과 정치·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광장의 함성'

을 반대세력에 대한 분노가 아닌 화합과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동력으로 이끌어 역사적 이정표로 전환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집안이 가난할 때는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위대한 지도자와 충신이 더욱 생각나는 법.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를 택하여 각종 분열·갈등을 마침표를 찍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가야 한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위기의 대한민국, 정의도 안보도 경제도 다 중요하다. 그러나 단합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한다.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듯이 정치인은 천심인 믿음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 때 "이게 나라냐"라는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세워야 할 우리의 책무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無等鼓

예수·부처·공자가 선거를 치른다면 어떻게 될까. 성인(聖人)들이란 만큼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 없이 투명한 정책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방 대선 정책으로 승부하는 포지티브 선거만으로는 당선에 힘든 것이 현실이다.

198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듀카키스를 이긴 것은 네거티브 전략 덕분이었다.

문모닝·안모닝

양당제가 확고한 미국에 당선된 8년 단위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정권을 주고받았다. 공화당의 레이건이 8년 집권을 한 뒤라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초반엔 듀카키스가 압도적으로 부시를 앞서나갔다.

하지만 부시가 네거티브 전략을 퍼자 분위기가 반전했다. 듀카키스는 매사추세츠주 지사 시절 강간범의 휴가에 사인했는데 그 강간범이 휴가 중 살인을 저질렀다. 부시는 듀카키스가 범죄에 너무 관대하며 끊임없이 유권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TV토론에서 듀카키스의 답변이 결정타가 됐다. "당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했다면 법원에게 사형을 집행하겠습니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했다가 냉혈한으로 찍힌 것이다.

2008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진보신당 노화찬 후보가 한나라당 홍욱 후보에게 패한 것도 네거티브 전략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홍 후보가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도 포지티브 선거를 하겠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패배했다.

그렇다고 네거티브 전략을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 2012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

리려고 나왔다"고 공화당의 레이건을 공격했다. 이 말은 보수층의 분노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박 후보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대선이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로 형성되면서 네거티브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양측의 비방전을 굶모닝에 빗대 '문모닝'(아침회의를 문재인 패리로 시작한다)이나 '안모닝'(눈만 뜨면 안철수 패리기로 시작한다)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네거티브에도 수준이 있어야 한다. 네거티브만 하다가는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지털실 220-0536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 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